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의 셈 방식

홍우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1-23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러시아의 가스 열기로 녹일 수 있다는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 북한을 통과하고 남한이 종착지인 러시아의 가스관 프로젝트 소식은 지난 8월 24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흘러나왔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스관 건설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8월초 한·러 외무장관 회담에서 자신들이 가스관 사업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장담하였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논평을 통해 가스를 포함하여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에서 러시아와 공동인식이 이루어졌으며, 실무그룹을 조직·운영하는 방향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쪽을 살펴보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한·러 정상이 만나게 될 올 11월 중 남북관계에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기자 간담회를 빌려 가스관 사업은 남·북·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며, 가스관이 한번 설치되면 쉽게 끊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만일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연결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러시아를 매개로 한 또 하나의 남북경협사업이 가시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희망어린 눈빛으로 가스관 사업을 바라보는 분석들은 이 사업을 통해 세 나라가 얻는 이득을 다음과 같이 추산하고 있다. 요약하면 러시아는 자원을 파는 동시에 한반도에 새로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북한은 1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통과

료를 얻을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내다본다. 우리는 저렴한 운송비용 덕분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의 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동시에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를 한다.

그러나 밝은 면만 깃들여 있지는 않아 보이기도 한다.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사업을 기대치로만 평가할 수만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의문부호를 빼어 버릴 수 없는 부분은 남·북한 간의 경제사업이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 경제와 정치 두 영역 중에 어느 것이 원인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것이 결과가 되는 것인지는 학계에서도 오래된 논란거리다. 하지만 남북관계 역사에는 정치가 경제의 상위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 가깝게는 북한이 지난 달 22일 금강산지구내 남측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며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사건이 있다. 또한 남한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제재로 5·24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즉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사업은 정치적인 이유를 핑계로 남한 혹은 북한 당국에 의해 단절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남북관계에서 정치영역이 경제영역의 상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두 국가 모두 서로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위협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안보는 언제나 다른 사안을 넘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개혁으로 인해 남한이나 외부사회의 정보가 물밀 듯이 북한 내로 흘러들어가고 이로 인해 정권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남북경제 사업으로 혜택을 입는 남·북한의 수혜자들이 각기 그들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배계층은 남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남한과의 경제관계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관계에서 얻는 이득은 통상적인 북한 주민이 아닌 소수 엘리트 계층에게만 흘러들어 갔다. 설령 남북 경제관계에서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얻는 이득이 없어진다 해도 이들은 단지 불편할 뿐이다. 이들은 다른 곳에서 이득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주민으로부터 지배계층에 이르는 상향식 압력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가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상향식 압력이 행사될 수 있는 남한의 경우도 대다수의 국민정서는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이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과 경제문제를 분리하자는 주장에 호응하지 않는다.

아마도 가스관을 연결하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걸림돌을 넘어 마무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데도 정작 가스의 통과는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이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자신들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을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의 주요 군사물자를 제공하는 국가라면 통제의 수단이 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가스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러시아가 그러한 통제수단을 갖는 것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 애석하게도 남한이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것은 러시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는 얼마 전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는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으로 지구 내 재산은 우리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남측과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구실은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는 가스관에도 해당된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행여나 그들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은 가스관을 막아 우리를 통제하려 들 수 있지만, 북한의 영토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우리가 막아 북한을 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스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이러한 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큰 탓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지는 말아야 한다. 조셉 나이 교수도 얼마 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문제는 정치적인 틀(framework)에 의해 좌우된다고 언급한 사실은 우리가 곱씹어 봐야하는 면이기도 하다.